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2026. 8. 31.(월)

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원 투자...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박차
- 역대 최대 전기차 보조금 예산(+33%), 히트펌프 예산(+522%) 편성, 녹색전환 가속화
-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 확대(+7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2027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보다 18.3% (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①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1조 9,351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 가운데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망 건설이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의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금액도 늘린다.

* (수요유치형 변전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등 전기 사용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 내 전력인프라 선제적 구축

** (가상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설치하여 계통 고장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평상시 송전용량을 확대

-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 : ('27) 658억 원
- 송전단 ESS 구축지원 사업 : ('27) 5,724억 원
-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ESS 설치 보급(가상송전망) : ('27) 24억 원
- 계통 전기품질 강화를 위한 안정화 설비 구축 : ('27) 360억 원
-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 ('27) 27억 원
-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 : ('27) 196억 원
-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 ('27) 3,500억 원
- 한국전력공사 출자 : ('27) 5,000억 원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도 강화하였다. 동북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과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도 늘린다. 한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 ('27) 1,196억 원
-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 ('27) 81억 원
-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 ('27) 2,500억 원
- 호남권 반도체산단 폐수처리 : ('27) 85억 원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깨끗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1.5조 원 규모로 편성한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용자 예산은 올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대폭 증액(116MW→512MW)한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의 비용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용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면 전환(285억원)하고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커뮤니티솔라)도 대폭 확충(21개소→50개소)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정 대비 2배 수준인 750억 원(10만 가구 → 20만 가구)을 편성해 국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소형모듈 원자로(SMR) 제조·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26) 6,480억 → ('27) 15,108억 원, < 133.1% ↑ >
- 커뮤니티솔라 : ('26) 984억 → ('27) 2,347억 원, < 138.5% ↑ >
-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26) 2,143억 → ('27) 2,967억 원, < 38.5% ↑ >
-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26) 1,437억 → ('27) 2,058억 원, < 43.2% ↑ >
-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SMR 제조 관련 예산 : ('26) 188억 → ('27) 235억 원, < 25% ↑ >

③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녹색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차 주류화 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주택가 소음, 매연 문제 해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기 달성을 위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

(인센티브)을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기계 전동화를 위해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전기차 보조금) '17년 0.2조원 → '20년 0.7조원 → '23년 1.9조원 → '26년 1.6조원 → '27년 2.1조원

- 전기차 보급 : ('26) 1조 6,114억 → ('27) 2조 1,403억 원, < 32.8% ↑ >
- 전기 이륜차 보급 : ('26) 160억 → ('27) 230억 원, < 43.8% ↑ >
- 무공해 농업기계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 ('27) 10억 원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을 올해 대비 약 5.5배 늘리는 한편,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선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산하고 사업 규모도 대폭 늘려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26) 햇빛소득마을 49억원, 히트펌프 2억원 → ('27) 햇빛소득마을 651억원, 히트펌프 130억원

- 열에너지 전기화 : ('26) 157억 → ('27) 859억 원, < 447.1% ↑ >
-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소득 증대 사업(수계기금) : ('26) 51억 → ('27) 781억 원 < 1,431.3% ↑ >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7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예산 15억 원, 공급규모 7,500억 원)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예산 12억 원, 공급규모 3,000억 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자연냉매 등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교체하려는 사업장(40개소)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재정융자 : ('26) 2,819억 → ('27) 3,000억 원(공급규모 0.3조 원), < 6.4% ↑ >
- 이차보전 : ('26) 929억 → ('27) 1,177억 원(공급규모 8.3조 원), < 26.7% ↑ >
- 보증 : ('26) 1,500억 → ('27) 1,714억 원(공급규모 1.7조 원), < 14.3% ↑ >
- 펀드 : ('26) 1,132억 → ('27) 2,230억 원(공급규모 0.3조 원), < 97.0% ↑ >
- 저GWP 냉매기기 교체 지원사업 : ('27) 200억 원
- 자동차 중소부품사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지원사업 : ('26) 12억 → ('27) 191억 원 < 1,444.1% ↑ >

④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와 가뭄, 폭조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해 가뭄 발생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2개)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확충(4개소→7개소, 공사기준), 가뭄에 취약한 취·양수시설 개선도 지속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 도시침수 예방(강남역·광화문·도림천) : ('26) 221억 → ('27) 815억 원, < 268.8% ↑ >
-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 ('27) 30억 원
-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지하수저류댐 등) : ('26) 120억 → ('27) 249억 원, < 107.5% ↑ >
- 취양수시설 개선 : ('26) 470억 → ('27) 788억 원, < 67.7% ↑ >

이번 정부 내 폭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74.7%가 증액된 5,986억 원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살살이 점검하고 폭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5개소→28개소)하여 폭조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폭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하고(44개소→55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효율개선(3개소→8개소) 등 수질개선 사업도 강화한다.

- 국가주도 폭조집중관리 대책사업 : ('27) 1,048억원
- 폭조 대응을 위한 수계기금 사업 : ('27) 522억 원
- 공공수역 폭조발생 대응(실시간 모니터링 등) : ('26) 272억 → ('27) 460억 원, < 69.1% ↑ >
- 비점오염저감·가축분뇨처리시설 등 SOC : ('26) 3,154억 → ('27) 3,956억 원, < 25.4% ↑ >

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투자도 강화한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확충한다. 폐배터리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임을 전문기관이 인증하여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회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80억 원)한다. 그리고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 설치되는 전남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재활용시설(22개소)에 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설비 도입도 지원(61억원)한다.

-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 운영 : ('27) 8억 원
- 미래폐자원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 ('27) 80억 원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 ('27) 23억 원
- 고품질 재활용 기반 구축 : ('27) 61억 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올해 대비 대폭 증액(100억 원 → 2,447억 원) 편성한다. 사육곰 종식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사육곰 임시보호와 해외이송, 월악산 국립공원 내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국민 제안을 반영해 기존 사업도 고도화한다. 보다 의미있는 국립공원 탐방·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최초로 시행하고 실물 스탬프투어 여권 발행도 늘린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주요 명소 방문 시 GPS와 사진 인증을 결합한 디지털 방식의 스탬프투어 앱 활용

-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 ('26) 100억 → ('27) 2,447억 원, < 2,347% ↑ >
- 사육곰 임시보호 및 해외이송 : ('27) 35억 원
- 월악산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 : ('27) 90억 원
- 국립공원 스탬프투어(국민참여예산) : ('26) 2억 → ('27) 15억 원, < 650%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 : ('26) 46억 → ('27) 71억 원, < 55.5% ↑ >

한편 2027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도 과감히 개편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7년 기후부 예산안 개요.
2. 주요 생활밀착형 사업 목록.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장	송용권 (044-201-6330)
		담당자	서기관	김무연 (044-201-6337)
		담당자	주무관	김혜영 (044-201-6342)
<메가프로젝트 전력 총괄>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정진숙 (044-203-3907)
<메가프로젝트 용수 총괄>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장	김상훈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안치용 (044-201-7119)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태양광산업과	책임자	과장	홍수경 (044-203-5370)
		담당자	사무관	우제환 (044-203-5373)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태양광보급추진단	책임자	부단장	이주형 (044-203-3892)
		담당자	사무관	송화령 (044-203-5393)
<재생에너지 R&D>	태양광산업과	책임자	과장	홍수경 (044-203-5370)
		담당자	사무관	김화현 (044-203-5377)
<SMR>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성진 (044-203-5320)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5325)
<전기차, 전기이륜차, 무공해 농업기계>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책임자	과장	박판규 (044-201-6880)
		담당자	서기관	강찬 (044-201-6882)
		담당자	서기관	김나승 (044-201-7541)
<열에너지 전기화>	열산업혁신과	책임자	과장	권병철 (044-203-5140)
		담당자	사무관	양해리 (044-203-5143)
<녹조·수질관리 수계기금지원> <녹색·전환 금융>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주창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044-201-7002)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민선 (044-201-6690)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장	임호순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우정아 (044-201-6710)
	녹색산업해외진출TF	책임자	과장	정명규 (044-201-7560)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44-201-7562)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범수 (044-201-6860)
		담당자	사무관	한상우 (044-201-6878)
<자동차 온실가스LCA>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장	이경빈 (044-201-69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6921)
<도시침수 예방>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장	한명실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박상동 (044-201-7025)
	물재해대응과	책임자	과장	최재웅 (044-201-7651)
		담당자	사무관	천병호 (044-201-7655)
<가뭄대응>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201-7140)
		담당자	사무관	장화영 (044-201-7157)
<취양수시설 개선>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성진 (044-201-7618)
<미래폐자원, 배터리>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책임자	부단장	심은수 (044-201-7417)
		담당자	서기관	이준규 (044-201-7384)
<재활용시설 선별체계>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장	전원혁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서윤식 (044-201-7397)
<가습기살균제>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주무관	심희진 (044-201-6743)
		담당자	과장	김경석 (044-201-7245)
<사육곰>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장	김유리 (044-201-7244)
		담당자	사무관	김용철 (044-201-7312)
<국립공원 스택프>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장	정호경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김용철 (044-201-7312)
<화학사업장 지원>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장	손명균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신광진 (044-201-6843)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재정과	책임자	과장	강유신 (044-201-7730)
		담당자	사무관	이창형 (044-201-7731)

미래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한 2027년 예산안

총예산

2026년 예산
21조 7,582억원

+3조 9,737억원,
+18.3% 증가

2027년 예산안
25조 7,319억원

기본방향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으로
미래성장 기반 확충



재생에너지, 전기화에
역대 최대 투자로
녹색전환 가속화



환경현안에 대한
두터운 투자로
국민안심 환경 조성

중점투자사업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

1 전력공급 역량 강화

- 송전단ESS 구축(5,724억원) **신규**
- 가상송전망 설치(24억원) **신규**
-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3,500억원) **신규**
-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2 전력계통 인프라 확충

-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658억원) **신규**
-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360억원) **신규**
-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196억원) **신규**
- 송전망 지중화(27억원) **신규**

3 용수 인프라 확충

- 호남권 용수 공급(1,196억원) **신규**
- 충청권 용수 공급(81억원) **신규**
- 호남권 폐수처리(85억원) **신규**
- 수자원공사출자(2,500억원)

탄대한 에너지 대전환

1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공장지붕 태양광(용자)(5,440억원, 343%↑)
- 4대 정책입지 태양광(용자)(3,820억원, 55%↑)
- 햇빛소득마을 이차보전(285억원) **신규**

2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가정형 태양광(보조금)(750억원) **신규**
- 건물 태양광(보조금)(416억원, 45%↑)
- 주택 태양광(보조금)(172억원, 15%↑)

3 초격차 에너지 R&D

- 재생e핵심기술개발(2,058억원, 43%↑)
- 한국형 크라켄 배전망(140억원) **신규**
- SMR 제작지원(235억원, 25%↑)

속도감 있는 녹색전환 이행

1 동력원 전기화

- 전기차 보조금(2조 1,403억원, 33%↑)
- 전기 이륜차 보조금(230억원, 44%↑)
- 무공해 농기계 보급(10억원) **신규**

2 난방·열수요 전기화

- 히트펌프 보급(859억원, 447%↑)
- 주민소속증대 재생e사업(781억원, 1,431%↑)

3 녹색산업 전환

- 친환경 냉매사용기기 교체(200억원) **신규**
- 녹색·전환금융(용자 3,000억원, 6%↑)(이차보전 1,177억원, 27%↑)(보증 1,714억원, 14%↑)(펀드 2,230억원, 97%↑)

기후재난 대응역량 강화

1 도시침수 예방

- 대심도 빗물터널(강남·광화문)(555억원, 179%↑)
- 도림천 지하방수로(260억원, 1,138%↑)

2 가뭄 대비 수자원 확보

-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30억원) **신규**
- 지하수저류댐(249억원, 108%↑)
- 취·양수시설 개선(788억원, 68%↑)
- 가뭄취약지도 개선(6억원) **신규**

3 녹조 원천 차단

-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1,048억원) **신규**
- 녹조대응 수계기금 사업(522억원) **신규**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460억원, 69%↑)
- 수질개선 SOC(3,956억원, 25%↑)

지속가능한 안심환경 조성

1 채굴 없는 순환경제

-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8억원) **신규**
- 핵심광물 재활용시설(80억원) **신규**
- 고품질 재활용 기반 구축(61억원) **신규**

2 사람·자연 공존

- 사육곰 보호·해외이송(35억원) **신규**
- 월악산 자연학습장(사육곰)(90억원) **신규**
- 국립공원 스탬프투어(15억원, 650%↑)

3 환경피해 회복 및 예방 강화

- 기습기상군제 정부출연금(2,447억원, 2,347%↑)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71억원, 56%↑)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58억원, 26%↑)

붙임 2

주요 생활밀착형 사업 목록

1. 가정형 태양광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보급추진단 송화령 사무관, 044-203-5393)

(물환경정책과 신의찬 사무관, 044-201-7013)

사 례

- ○○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정부 지원을 받아 적은 초기비용으로 가정형 태양광을 설치하였고, 여름철 전기요금이 줄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규제지역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군에 사는 A씨는 최근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발전수익을 직접 배당 받으면서 가계 소득이 증대되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단독·공동주택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및 재생에너지 활용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 햇빛소득마을 조성, 가구별·마을공동시설 재생에너지(태양광, 히트펌프) 보급
- (사업기간) 가정형태양광 '26년 ~ 계속, 지역재생e사업 '26년 ~ 계속
- (지원규모) 가정형태양광 20만 가구(서울 5만 + 서울 외 15만 가구)
지역재생e사업 햇빛소득 93개 마을, 히트펌프 822개소(가구)

※ ▲가정형태양광 : (서울) 국비 30% / (서울 외) 국비 40%

▲지역재생e사업 : 햇빛소득 100%(주민지원), 히트펌프 80%

□ '27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6년 예산(A) ※ 추경 포함	'27년 예산안(B)	증감(B-A)	
				%
가정형 태양광	375(추경)	750	375	100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51	781	730	1,431

□ 기대 효과

- 국민참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 향상 기여

2.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자연공원과 김용철 사무관, 044-201-7312)

사 례

A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전국 국립공원을 방문해 인증 도장을 모으는 '국립공원 스탬프투어'에 참여하고자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27년부터 정부는 GPS 위치정보와 방문 사진 인증을 결합한 디지털 스탬프투어 앱을 운영하고 국립공원 스탬프 여권의 발행을 확대하였다. A씨 가족은 앱으로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

A씨는 가족과 전국 국립공원을 여행하여 소중한 추억을 쌓고, 자녀에게 자연환경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국립공원과 공원별 주요명소(자연경관+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스탬프투어 실물 여권 발행 확대
- (수혜대상) 전 국민(국립공원 탐방객)
- (사업기간) 계속
- (지원조건) 직접사업(국립공원공단 법정대행, 국비 100%)

□ '27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B-A)	
				%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2	15	13	650.0

□ 기대 효과

- 더 많은 국민들에게 스탬프투어 기회를 제공하여 국립공원 탐방·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탐방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

(물환경정책과 문유상 사무관, 044-201-7018)

사 례

벼농사를 짓는 A씨는 매년 논 물관리와 비료 살포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왔으며, 가뭄시에는 농업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뿌린 비료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녹조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들었다.

'27년부터 정부가 비료성분의 하천 직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물꼬설치와 완효성 비료*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며 농사 방식이 달라졌다. 완효성 비료* 사용으로 추가 비료 살포가 줄어 일반비료 사용량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배수로에 물꼬를 설치하여 논 수위를 효율적으로 편하게 관리하여 노동력도 줄었다. 이를 통해 가뭄기에도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료나 오염물질이 줄어들어서인지 하천의 녹조도 눈에 띄게 줄었다.

* 비료 성분을 코팅하거나 특수하게 만들어 작물의 생육기간 동안 양분을 서서히 내보내는 비료

A씨는 "예전에는 논 배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갔다 해야했는데, 물꼬를 사용하며 그런 일이 없어져 한결 몸이 편해졌고, 비료도 덜 뿌리게 되어 비료값을 아끼게 됐다" 며 "가뭄만 오면 늘 물이 부족할까 걱정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도 줄었고, 하천에 녹조도 많이 줄어들어 매우 만족스럽다"라며 반색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녹조 우심지역 대상, 단기간 내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대응 사업(국가 직접 사업) 집중 투자('27~'30)
- (사업대상)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영산강·섬진강 등
- (사업기간) '27년 ~ '30년(한시)
- (지원조건) 직접사업(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 '27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B-A)	%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	-	1,048	1,048	순증

□ 기대 효과

- '30년까지 녹조의 근본적 해결기반 구축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 기여

4. 이동식 해수담수화시설 지원

(물이용정책과 장화영 사무관, 044-201-7157)

(물이용정책과 여주연 주무관, 044-201-7156)

사 례

A군이 거주하고 있는 OO섬은 장기간 가뭄으로 섬 내에 있는 소형 저수지의 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지하수가 바닥을 드러내며 용수난에 직면함에 따라 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되었다. A군을 비롯한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사용할 수 있어 취사와 세탁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급수선 운항마저 기상 악화로 중단되면서 생활용수 부족 우려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일 120톤 규모의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현장에 이동, 설치하였다. 본 설비를 통해 인근의 바닷물을 즉시 정수하여 생활용수로 생산·공급할 수 있었고, OO섬은 제한급수를 해제할 수 있었다. 이후 OO섬에 비가 내려 저수지 등 수원이 회복될 때까지, A군은 큰 불편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가뭄 시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제작(2개소)·설치하여 도서·연안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 지원

* 무한한 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현지에서 바로 생산·공급이 가능

- (사업기간) '27년 ~ 계속
- (지원조건) 직접수행(한국수자원공사 위탁)

□ '27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B-A)	%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지원	-	30	30	순증

□ 기대 효과

- 가뭄 발생 지역에 해수담수화설비 이동 및 현장 설치로 신속하게 용수 공급, 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 개소당 120m³/일 규모, 비상시 약 1,000여명에게 하루 공급 가능한 수준

5. 배달용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김나승 서기관, 044-201-7541)

사 례

배달원 A씨는 하루 평균 150km 이상을 이륜차로 달린다. 일반 이용자보다 약 7배 긴 거리를 운행하다보니 연료비 부담이 큰 데다, 매일 내뿜는 매연도 늘 마음에 걸렸다. 전기이륜차로 바꾸고 싶어도 구매가격이 부담돼 망설여왔다.

한편, 주택가에 사는 B씨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배달 이륜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불편을 겪곤 했다.

정부는 '27년부터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일반용 전기이륜차에 지급되는 기본보조금에 더해, 배달용 이륜차 추가 지원을 기존 10%에서 50%까지 확대해 구매 부담을 낮춘다.

A씨는 "지원이 늘어나면 전기이륜차로 바꿀 계획이다. 연료비도 아끼고 매연 걱정없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씨도 "늦은 밤 이륜차 소음과 매연이 줄어들어 주택가가 한층 조용하고 쾌적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운송수단인 동시에 생계수단임을 고려하여 전기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사업기간) '17년 ~ 계속
- (지원조건) 지자체보조(보조율 50%)

□ '27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B-A)	%
전기이륜차 보급	160	230	70	43.8

□ 기대 효과

- 배달 종사자의 전기이륜차 구매 부담 완화 및 주택가 소음·매연 문제 해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